

2020. 12. 1.(화) 언론보도

이재강 경기도평화부지사, 파주 통일대교서 1인 시위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30일 임진각 임시집무실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평화 상징 개성공단 문 열어야” 21일째 세상 향한 뜨거운 외침

“개성공단 재개 선언은 단순한 구호가 아닌 ‘남북의 시간’을 위한 출발점입니다”

30일 오전 11시께 파주시 통일대교 남단. 손이 시릴 정도로 추운 현장에서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1m 이상 높이의 피켓을 목에 걸고 미동 없이 섰다. 통일대교 이북은 민간인 출입통제구역인 만큼 인적이 드문 가운데 이 부지사는 홀로 피켓을 통해 ‘평화의 상징, 개성공단 정상화’를 외쳤다.

이 부지사가 1인 시위에 나선 건 지난 10일 이후 21일째다. 당초 경기도는 지난 9일 남북이 개성공단 재개 선언에 적극 나설 것을 요청하는 차원에서 평화 부지사 현장집무실을 도라전망대(개성공단 이 바라보이는)에 설치·운영하려 했다. 하지만 유엔사령부는 승인을 해주지 않았고, 이 부지사는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 천막 집무실을 설치하고 통일대교 남단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이 부지사는 “개성공단을 당장 재개하자는 주장이 아니고, 재개 선언부터 하자는 것”이라며 “이는 기존 비핵화 프레임(선 비핵화 후 남북교류)을 평화 프레임(평화협력 최우선)으로 바꾸며 남북의 시간을 만들기 위한 출발점이기 때문”이라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평화가 오면 비핵화가 따라올 수밖에 없다”며 “이재명 도지사와의 이 부분에 대해 깊은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 부지사는 개성공단 재개 선언에 따라 탄력을 얻은 경기도 남북교류 사업들을 제시했다. 대표적으로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DMZ 내 남북 공동방역센터를 추진하겠다고 발언했다. 이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지를 밝힌 내용으로, 도는 조만간 북측에 공동방역센터를 공식 요청할 예정이다.

이어 ‘한강하구 중립수역 남북 공동 탐사 르 습지 등재·관리’도 약속했다. 한강하구는 정전협정상 군사분계선이 없는 중립수역으로, 70년 가까이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아 생태·역사적 가치가 높기 때문이다.

끝으로 이 부지사는 남북교류 사업을 지자체 주도로 이끌기 위한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구성’, ‘경기국제 평화센터 설립’도 강조했다. 지방정부협의회는 전국 50개 광역·기초지자체 간 평화협력 네트워크를 목표로 추진 중인 기구다. 이 부지사는 이번주 김경수 경남지사를 직접 만나는 등 참여 지자체를 늘리고 있다. 지난해 판교에 설립된 경기국제평화센터는 국제개발협력(ODA) 사업, 사막화 방지 조림, DMZ 국제행사 등 각종 평화 분야 국제협력사업들을 총괄한다.

이 부지사는 “한반도 공동 경제의 실험장이었던 개성공단이 폐쇄하고, ‘남북 평화의 문’도 닫혔다”며 “남북 양측 정부가 재개 선언 이후 제재를 넘어 국제적 협력을 끌어낼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여승구기자

평화오면 비핵화 따라올 수밖에 없어
재개선언은 남북의 시간 위한 출발점

“개성공단 재개로 평화 정착되면 비핵화는 자동으로 따라올 것”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 '개성공단 재개선언' 촉구 21일째 1인 시위

한 겨울의 따스한 바람이 부는 30일 파주시 통일대로 앞에서 '개성공단 재개선언'을 촉구하며 피켓을 들고 21일째 1인 시위를 이어가는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만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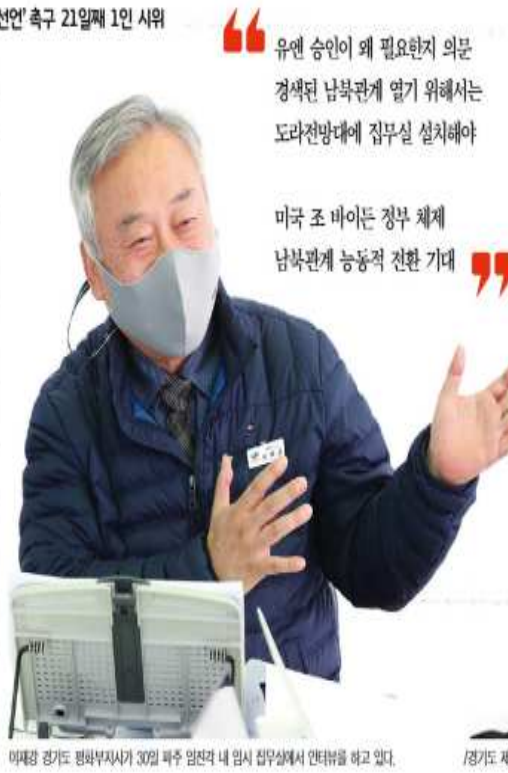
“개성공단 사업은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합의의 보고 시작했는데 왜 유엔의 승인이 필요하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지사는 경색된 남북관계를 열기 위해서는 민중선 도라산전대에 집무실 설치할 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지사는 이달 초 도라산전대 내에 평화부지사 집무실을 설치하려고 했었다. 하지만 유엔사의 승인을 받지 못해 임진각 평화누리 공원에서 임시 집무실을 설치해 도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부지사는 “1보행사단 측에게 집무실을 설치해도 된다는 화신을 받았으나, (김자기) 유엔사의 승인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임진각에 임시로 도라산에 들어가기 전까지 임진각 바람의 언덕에 10일 남 집무실을 설치했다. 유엔사에 집무실을 도라산으로 옮길 수 있다고 승인해달라고 요청을 한 상태다”라며 현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성공단 사업은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합의의 보고 시작했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30일 파주 일선역 내 임시 집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유엔 승인이 왜 필요한지 의문
경색된 남북관계 열기 위해서는
도라산전대에 집무실 설치해야

미국 조 바이든 정부 체제
남북관계 능동적 전환 기대

고 박근혜 정부가 중단선언을 했는데 미국 승인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개성공단 재개를 위해서는 기존 틀에서 벗어나는 과감함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그는 “미국의 승인이나 대북 제재 등에 관해서는 개성공단 재개는 불가능하다”며 “개성공단 재개선언을 하고 나서 제재를 넘어서야 남북이 함께 협조적 협력을 끌어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개성공단 재개를 통해 남북간의 평화 프레임이 정착된다면 북한의 비핵화는 자동으로 수반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 부지사는 “개성공단 재개선언 촉구를 개성공업지구 첫 제품 생산일인 12월 15일 임진각에서 도라산까지 3보 1배 하겠다”며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아울러 남북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이달 남북지방협력협의회를 만들어 타 지방정부와 경기도가 축적했던 남북교류에 대한 지식을 나누고 정보를 공유하는 장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 부지사는 “지방정부협의회에 경기도 31개 시군과 부산 금정구, 남구, 동구와 충청도 당진시, 거제시 합천군, 서울 중구 등 41개 지방정부가 참여하기로 했다. 앞으로 8~9개의 지자체가 더 참여할 계획”이라며 “정부는 경기도

가 평화와 개성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 부산시가 북의 남포시장 협력하는 등 남북 지방정부간의 교류가 이뤄지도록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했다.

또 이 부지사는 현재 코로나19,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감염병에 대해 “조만간 도가 북한과 만나 협의하게 된다면 공동방역에 대해 논의할 생각이다”며 “인도주의적으로 보건협력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들) 지속적으로 추진할 생각이다”고 구상을 밝혔다.

아울러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정, 복지, 평화의 지표 3가지 중 평화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다”며 “0.1% 부지사로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한 조 바이든 체제에 대해서는 남북이 능동적으로 남북사업 추진을 전망했다.

이 부지사는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서는 남북 한미관계가 종속되는 불합리한 측면이 많았다. 조 바이든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면 남북관계가 능동적으로 변화할 것”이라며 “이런영 돌입부 장관이 남북의 시간이 왔다고 했듯이 남북이 손을 맞잡고 일을 추진하는데 바이든 정부가 긍정적인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재은 기자

기호일보

경기도가 전국 50여 개 광역·기초지자체가 참여하는 ‘남북평화협력지방정부협의회’를 연내 출범한다. 이재강 도 평화부지사는 30일 임진각 평화누리공원 현장 집무실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12월 중으로 도내 31개 시·군을 비롯해 서울·부산·충청·경남 등 전국 광역·기초지자체가 참여하는 남북평화협력지방정부협의회를 출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는 그동안 북한과의 교류로 축적한 노하우를 협의회에 참여하는 광역·기초지자체와 공유해 각 지자체별로 남북협력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

“남북협력사업, 지자체가 주도하자”

전국 규모 지방정부협 이달 출범

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그동안 지자체가 추진하는 남북협력사업이라도 그동안 통일부 등을 경유해 추진되는 경우가 많아 직접적인 소통을 하기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 협의체 구성을 통해 지자체가 북측과 소통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과거엔 지자체가 남북협력사업의 보조적 역할을 하는 데 그쳤지만 지난해 통일부가 지자체를 대북지원사업자로 승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지자체가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게 됨으로써 향후 협의회를 남북의 지자체를 직접적으로 연

결하는 소통 창구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도는 민선7기 출범 이후 북측과 함께 ‘아시아·태평양 변역을 위한 국제대회’를 개최하는 등 독자적인 대북사업을 진행해 왔다. 이 부지사는 “지난 27일까지 전국 41개 지자체가 협의회에 참여하기로 결정했고, 앞으로 8~9개 광역·기초지자체가 참여 의사를 밝힐 예정”이라며 “출범에 앞서 남은 8~9개 광역·기초지자체와 협의를 마무리하고 언택트 방식으로 출범식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호 기자 kyh@khihoilbo.co.kr

